

第252回國會 (臨時會) **일자리創出을위한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2月28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업무보고

- 가. 재정경제부소관
- 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다. 산업자원부소관
- 라. 노동부소관
- 마. 여성부소관
- 바. 중소기업청소관

審査된案件

1. 업무보고 1
- 가. 재정경제부소관
 - 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다. 산업자원부소관
 - 라. 노동부소관
 - 마. 여성부소관
 - 바. 중소기업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재정경제부소관
- 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다. 산업자원부소관
- 라. 노동부소관
- 마. 여성부소관
- 바. 중소기업청소관

○위원장 임인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청년 고용 촉진 대책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부 측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각 부처가 마련하여 시행 중인 대책을 위원님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6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입니다.

저희 올해 경제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당연히 오셔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법사위에 출석을 하셔야 될 사정이고 또 차관님께서서는 부득불 국무회의에 출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고용동향, 2005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기본방향, 다음 2005년 중점과제를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충,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적 일자리 발굴 순이 되겠습니까마는 상당 부분은 각 부처에서 또 따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고용동향입니다.

2003년에 급격히 위축된 고용사정은 2004년 들어서 수출 호조와 여성 취업 증가 등에 힘입어서 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가 꾸준히 감소해 오던 제조업에서 2004년에 이례적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제조업 고용 증가에 따라서 사업 서비스업의 고용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음식·숙박업과 기타 공공·수리·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창업과 취업이 가능한 이들 업종에서 여성들이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대거 참여하여 체감경기의 부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숫자는 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건설업은 건설경기의 위축 등을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업률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청년 실업률도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1월의 고용동향을 2쪽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1월, 2월은 설이 1월에 있느냐 2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례골러(irregular)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 1월 고용동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3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기본방향입니다.

작년에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정 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임금안정과 노동쟁의 자체 등으로 노사 관계가 안정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일자리 창출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시차가 길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금년의 고용사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가변성이 커져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가계부채 조정이나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서 내수 회복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즉 고용의 성장 탄성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이상의 성장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하반기에는 종합 투자 계획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육성,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 10억 원당 취업유발 계수가 제조업은 14.4명인데 비해서 건설업은 20.8명, 서비스업은 24.3명입니다.

또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추세를 추가적 일자리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즉 취약계층의 복지와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근무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5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간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4~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전체적인 경제운용을 통해서, 5% 성장을 통해서 한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연간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문에서 새로운, 과거의 추세상으로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2~3만 개 창출되어야 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일자리한 2~3만 개를 창출한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4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첫 과제는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시정책을 경기확장 기조로 운영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증가, 내수회복, 경제성장의 선순환고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규모를 11.8% 증가시켰고 상반기 중에 최대한 조기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59%까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율을 1%p 인하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다음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용 및 경기 파급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서민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공공부문의 건설사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투자계획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의 확충, 군아파트 건설, 하수관 신설·교체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대상사업과 규모를 거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제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라든가 판교·파주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 기업 신도시 등 새로운 투자사업에 대해 최대한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역시 기업인 만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기업 입장에서 투자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서 핵심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00여 건 중에 1000여 건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 정비하여 연내에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전산화하는 기본법을 상반기 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인세율도 2%p 인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고용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육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 7일에 마련한 중소기업종합대책과 12월 24일에 발표한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조업의 경쟁력 지원,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여행에서 소비한 돈이 120억 불 정도 됩니다. 이는 재작년에 100억 불에 비해서 20%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소비가 20% 정도 늘어나는 것은 주로 관광·레저라든가 교육·의료 같은 서비스를 해외에서 받으러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서 여태까지 의견대립이 심해서 진전이 별로 없던 교육, 의료, 법률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마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세제, 금융, 인프라, 규제 등의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보건, 복지,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

리 만들기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구조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시점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0만 개 내지 4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60만 개 내지 290만 개가 더 줄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문화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의 체감 수준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수익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고용안정센터, 민간기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동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입니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46만 명에게 직업훈련 및 연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의 어려운 취업여건 등을 고려해서 1/4분기 중에 연간 계획의 62%, 상반기 중에 81%까지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교대제 전환 등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고용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의 확산은 노사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

구에서 논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양질의 단시간근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파트타임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부차관입니다.

부총리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국무회의 때 부총리께서 직접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산업계와 교육이 연관되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원 정원을 확보한다든지 장애아 특수교육 보조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자리가 생겨 나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총괄국장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대책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인적자원개발정책 혁신방향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관련 대책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현황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전체 실업자 90만 4000명 중에서 약 48%에 해당하는 43만 명이 실업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학졸업자 취업현황을 보면 고등교육 전체 취업률은 현재 66.8% 수준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이 대학보다 높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다소 높으며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목하는 원인은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관련한 고용증가세 둔화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의존 가속화 문제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내용적으로 보면 구직자들의 높은 보수와 근무여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년층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노동시장 정보제공 부족을 주목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인적자원개발 정책 혁신은 무엇보다도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은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배양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무대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캐패시티(global capacity)를 함양해서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학력 단계별로 직업 기본능력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체제 개편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며, 평생학습을 통한 생업능력 향상,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노동시장을 연계한 정보 제공·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단계에서는 진로·직업지도 및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도모하면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 설계를 위한 진로·직업지도 강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력 단계별로 진로·직업지도 강화를 위해서 초·중등 단계에서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학부모·기업인 등을 이용한 인력 풀(pool)을 구성해서 직업교육강사로 활용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와 공조해서 대학생의 기업연수 체험기회를 확대해서 실무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진로직업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체제 개편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있다고 보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부나 학과 통폐합, 그다음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을 15% 감축하면서 동시에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어든 학과나 학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학생 장기 인턴십 활성화로 인한 실무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이 기업체에서 5개월간 연수한 다음에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인턴십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서 기업의 연수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기업을 육성하여 학생의 교육실습·창업·취업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04년도에 40개 교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를 늘려서 50개 교에 1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산학협력단을 설치해서 학교기업 육성 지원, 지적재산권 취득, 기술개발·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7개 대학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318개 교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지역산업단지 R&D센터로 육성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4년도부터 08년도까지 매년 400억 원씩 5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범 사례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09년까지 매년 40억 원을 들여서 이공계 교육과정 평

가 및 개선, 교재개발 등에 투자를 해서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과의 계약학과를 확대해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표시에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영남대가 공조해서 영어와 일본어학과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업·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일명 NURI사업으로 알려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NURI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저희 목표치는 취업률을 미니멈 70%까지 끌어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을 통한 생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동기유발을 위해서 종합적인 교육·훈련비 지원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e-러닝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학습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과제는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초·중등 교원 5539명과 국립대 교원 292명을 증원하고,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확대 채용은 금년부터 08년도까지 연간 5000명씩 추진할 계획이고 국공립 유치원 중일반 보조원 배치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장애아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도 금년도의 경우에 225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36명,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32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추가확보 방안으로서는 해외 취업을 위한 어학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 간호사, 일본의 경우에 IT인력, 중국의 경우에 회계·금융·경영 등 비즈니스 전문가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에 우리 대

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 지원을 통해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도 08년도까지 100여 개의 이공계대학 연구소를 육성해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과제는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해서 기업, 대학, 학생들에게 사회·경제의 변화 추이라든지 교육과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탐색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예비 구직자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와 산업 간의 연계를 위한 분류체제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체제 정비가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전망을 내놓기 위해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공조해서 일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라는 책을 발간해서 이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서 특히 재학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취업률 공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60개 교의 취업률을 공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서 취업률 공표를 통해서 대학들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노동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공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종합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취업지도와 진로개발을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인력개발센터와 고용안정센터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학습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업·대학·정부 간 협력체제를 강화

해서 특히 인력양성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자 지향적인 인력양성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경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이공계 대학의 커리큘럼 개선이라든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인력교류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특히 해외 취업, 연구, 인턴십도 확대하는 한편 학내에서 근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제도(Work Study Program)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측의 인적자원 개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특히 대학과 기업 간 인력이나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으로 졸업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 교원,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 및 국내외 인턴십 확대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 중이라서 차관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은 제조업 내지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분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부분은 소득 1만 불을 넘고 2만 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고도의 IT관련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약 8만 5000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출 2540억 불, 외국인 투자 128억 불, 이렇게 전체 경제의 불륨을 늘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금년도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면서 작년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대별해 보면, 첫째는 금년에는 투자를 대폭 활성화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지식서비스산업 등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역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산업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장 이동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입니다.

금년도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특징,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동향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취업자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97년부터 04년도까지 취업자 수가 13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17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의 특징은 과거 산업화시대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역량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지속되는 반면에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 유휴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활동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됨

으로써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우려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투자활력의 제고 및 미래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실제투자로 연결시키고 수출·외국인 투자 및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규제 개혁을 통해서 투자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 416건의 규제에 대해서 수요자의 참여하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체험단의 파견을 작년도 125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300개 업체로 확대를 했고 재경부나 건교부 등 기업활동 관련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성·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업정서 완화를 위해서 시장경제 교육, 기업친화적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질적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28억 불의 투자 유치에 이어 금년도에는 120억 불의 투자 유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성장잠재력 및 고용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질적으로 고도화 및 투자환경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개선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주력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산업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주요 업종별 투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R&D·물류·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국가이미지 제고 및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겠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및 해외 언론을 활용한 국가이미지를 홍보하고 금년도에 있을 APEC 정상회의와 세계화상대회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교도의정서 발효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에너지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산업화 가능성·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분, 태양광, 풍력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투자 등을 통한 고용유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의 확대·인력양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고용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량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정부 내에서 10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 5개 분야에 대해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 인력양성센터를 통해서 석·박사급 핵심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의 신제품 수요창출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성장동력 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성장동력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입니다.

고용과 성장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자부 소관인 유통·물류 서비스의 고도화로 비용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등 신유통업체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RFID,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요를 창출하고 e-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내수부진에서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출업체의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고 환율하락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해서 수출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 BRICs 신흥시장 산유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하여 세계 일류상품을 작년에 440개에서 금년에 500개로 지원하고 해외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서 금융·정보지원을 강화하고 한류 연계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별로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시작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균형발전 시책을 본격적

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지역진흥사업과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연구기능이 접목된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제공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연수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인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11개 사업에 9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처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사업을 확대해서 차세대성장동력 분야 중심의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기간산업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자부 소관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장관입니다.

오늘 제4차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일자리 창출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OECD, EU 등 새로운 고용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능력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초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5% 경제성장과 40만 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확충 이외에 고용복지 정책을 통한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령자가 보다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평생능력개발 체제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끝나고 과거처럼 성장이 곧 고용증대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이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노민기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고용·복지정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작년도 노동시장 주요 특징, 최근 고용동향과 전망 그리고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재정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3번 항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 추진입니다.

법정시한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다수교대제 전환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감원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패러다임 확산을 통해서 희망기업에 대해 무료 컨설팅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부 등 자발적인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나 노사단체 등과 함께 파트타임 TF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삭감과 정년연장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에서 새로운 임금모델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직자와 상담원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이른바 동행면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취업정보 메일링서비스, 잡뉴스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고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에 구직자의 자기소개, 구인업체의 회사소개가 가능한 동영상서비스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각종 인력채용 지원금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사업으로는 클린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비 개발 보급 및 작업장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컨소시엄 사업도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4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부분의 비중이 과소해서 앞

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간병 및 자활지원, 외국인근로자 노동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분야 일자리도 여성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간병,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도 발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6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든지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TF도 운영키로 한바 있습니다.

간병서비스의 활성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그간 노동부는 확일적으로 운영해 왔던 고용안정센터를 종합센터, 일반센터 등으로 개편하고 워크넷, 직업훈련전산망, 고용보험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고용정보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범정부적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과 고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선진고용서비스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기관, 지자체,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각각 강화하고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고용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 사업과 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서 산업별인력개발협의회 운영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도 혁신할 계획입니다. 기업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능력개발투자 양극화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혁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대책입니다.

청년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 1월 28일 총리님 주재로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고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1월 28일 의결된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대책이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공급측면과 인프라측면에 있어서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노사파트너십 구축 또는 노사갈등 예방과 같은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사회협약정신의 지역, 기업단위로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을 지원하고 분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대응함으로써 작년도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이 다소 감소하는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위해서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0억으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사정 간 대화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정부 대응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노사관계법, 제도 선

진화 방안을 입법 추진해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여성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차관께서 법사위에 출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에 여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외부의 잠재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까 상관계수가 0.95로서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OECD 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과 한국의 격차가 6.8%로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인 경우에는 20.8%가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이 6.8% 성장하려면 120만 명의 추가 여성노동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졸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한 100만 명으로서 1인당 대졸자 투자비용 약 2억 450만 원으로 보면 투자손실은 약 2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1만 불 시대 진입 이후에 10년간 한국의 여성경제활동률은 1.1% 증가함으로써 정체된 현상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잠재인력의 활용 없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여성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견인 정책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여성부에서는 여성인력의 계층별, 생애주기별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중소기업의 여성 유망직종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미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직종 교육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처를 발굴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사라든가 재할간호, 문화체험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부족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존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학력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청년 대상의 집중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5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체계적인 취업교육과 진로정보 제공을 통해서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양대, 아주대, 충남대, 전북대, 신라대 등 5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과 교육, 취업지원 기능 등을 통합한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의해서 06년도까지 30개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첨단·고도 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지방대학 출신 우수여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취약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방과 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인력수요를 창출하는 교사 추가배치 지원이 아동대 교사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2180명을 신규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04년도에 신축한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담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

니다.

다음은 여성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능과 기술을 지닌 여성기술인력에게 100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여성가장에 대해서도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고용을 창출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보강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공동협력사업을 여성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여성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여성박사인력 DB, 여성과학기술인력 DB, 국가인재 DB 등을 구축했고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의 타 부처와의 협력·조정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만 불 시대의 여성인적자원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함께 주요 과제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 및 회의의 참여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협약과 조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한층 힘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입니다.

오늘 청장께서 중소기업중앙회 총회 관계 때문에 제가 대참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최근의 동향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창출계획 순입니다.

먼저 최근 일자리 동향은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의 산실이었던 것을 97년에서 2003년까지 6년 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97년에 280만 명 고용하던 것이 03년에는 150만 명으로 120만 명이 준 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에 820만에서 1040만으로 220만 명이 늘 정도로 고용에 대한 흡수력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향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고용 면에서 본다면 10배 이상의 창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형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전략은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과, 두 번째 기존에 있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있고, 세 번째는 아직도 11만 개라는 빈 일자리가 있습니다. 빈 일자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먼저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규제라든지 각종 제도가 장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지방 중기청에 설치·운영해서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규제를 연구·발굴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창업규제연구·발굴팀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창업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창업보육도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 특성에 맞게 입주기간을 차별화한다든지 또는 우수 보육센터의 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291개 센터에서 4000여 개 업체가 보육 중이긴 합니다마는 보육역량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도 기존 회사보다는 창업하는 회사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을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전문 창업과정을 신설해서 6개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이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지 인큐베이터에 입주시킨다든지 또는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연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과정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창업교육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 창업금융 지원으로 창업자금 3500억을 공급하고 또 보증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에 돼 있는 벤처기업을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벤처투자를 확대해 가고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 주셨기 때문에 4년 동안 1조 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금년도 저희가 1000억 하고 창투회사가 4000억을 해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금과 정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가고 투명경영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을 창업·벤처 보증전담기관화해서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토록 해 가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보면 빈 일자리가 11만 개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진한 게 많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홍보처, 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넣도록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또 대학·공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금년도에 6만 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기피요인을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확대해서 현장에서의 열, 냄새, 분진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교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서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충원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라든지 학부를 신설해서 많은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연구실과 실습실이 있는데 여기를 특화시켜서 전문인력 양성의 산학협력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같이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같이 개발한 사람도 기업에 취업이 되고 연구성과도 기업에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고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부모·학교·기업 간 취업협약 체결을 통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개 공고부터 시범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채용패키지와 해외시장 개척요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나고 더 질의하실 분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박상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6개 부처·청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상상 가능한 모든 시책이 다 망라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짐작하게 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대개는 공급자 위주로 정리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홍철 대전시장으로부터 대전 시내에 음식점 수가 2만 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인구 수 140만으로 나눠 보니까 대략 인구 70명당 음식점이 1개더라고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천안 출신인데 천안시의 음식점 수를 조사해 보니까 6571개, 인구 수로 나눠 보니까 75명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90년도에는 인구 178명당 음식점 수가 1개였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면 몰라도 대체로 인구 80~100명 미만당 음식점이 1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가 어려워져 장사가 안 된다고보다 근본적으로 음식점 수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하고 추리를 해 보니까 IMF를 겪으면서 많은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손쉬운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 과잉공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최근에는 음식점이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대형화되는 음식점으로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40~50명당 음식점 하나가 공급되는, 그래서 결국 4인 가족으로 따져 보면 인구 10세대당 음식점이 하나 꼴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분야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실업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때려치우고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절하게 통계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잉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잘 좀 따져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자를 걱정하는데 청년실업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조사를 보니까 90년도에 고교졸업생의 33%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는 26.9%, 80년도에는 27.2%, 9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2%인데 2000년도에 얼마나 하면 68%입니다. 10년 사이에 대학이 갑자기 2배로 늘어요. 그리고 2004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3%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의 실패이다. 어떻게 보면 인력공급의 실패인 것이지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부처에서 청년실업을 보고하셨는데

요, 청년실업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교육의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 및 이로 인한 오랜 취업 소요기간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분석도 옳겠지만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이 됐는데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적절하게 그것에 대한 국민계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인식을 개선해 주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5개 부처에서 보고하는데 하나도 없다가 중소기업청의 정준석 차장님이 꼬트머리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인식개선 및 취업 연계로 빈 일자리를 충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했다가 맥이 빠지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대학졸업자를 과잉공급을 해 놓고서 뒤늦게 치유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 70년대, 60년대에 생산직 근로자를 속어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생산직 직원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직 직원은 옛날의 생산직 직원이 아닙니다. 전부 자동화시설 내지 환경이 개선돼서 이제 인식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90년대까지 33%였던 대학진학률이 지금은 82%까지 가는데 이걸 무슨 재주로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로 가고요, 이런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조업 기업주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이다, 나쁜 나라가 아니다, 특히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중국으로 엑소더스 하듯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의 개최를 전후로

해서 노사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거기 가 가지고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간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이만큼 좋아졌고 그러니까 여유 인력이 우리 제조업 분야로 많이 가서 취업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산업도 육성시켜서, 또 이것이 선순환을 해서 계속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느 부처에서 보고하신 것에 대학교의 취업지원실 직원이 평균 4.4명이다,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대학별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매크로하게 이런 문제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 의령·함안·함천 출신 김영덕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할 때 8% 이상이었고 한 80만 명 정도 고용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완전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 성장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에서 오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나누는 것이라든지 빈 일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자세,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 90만 명 중에서 43만 명 아닙니까? 반 이상이 청년실업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의 대다수가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총 몇 명이나, 그들이 2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직

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아니면 기존의 빈 일자리 채우는 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갔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역량 강화,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대학의 구조조정도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실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대학생들의 장기 인턴십 활성화를 보니까 이미 대학생활 할 때부터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과의 새로운 관계, 또 지금 대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실제 경제가 어렵고 그러한 어려운 경제에 내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 뭇을 하겠다고 할 때 적어도 중소기업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고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고 난 뒤 졸업하고 났을 때 그러한 부분을 학점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대학의 교육과 기업의 현장 수요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합니다. 아까 보고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학 취업률을 공시해서 우선 학부형들이 또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실제 어느 학과가 취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덕 위원 특히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비수도권의 4년제 대학들이 학교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서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면 대학 1년차 때부터 기업의 현실을 잘 알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결국 이공계 교육과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석·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떻게 기업에 들어가서 활용되고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

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문제, 신산업협력사업 400억 사업을 지역의 산업체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덕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자리 추가 확보 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이 새로운 일자리 아닙니까? 지금 대학이 어학 및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 경제통상을 하다가 지금 중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또 지금 12, 3억 인구가 되는 거대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학교육이 외국어 아니면 전체 초·중·고·대학까지 갔을 때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체계로서 우리가 적어도 인도까지를 내다보는…… 중국, 인도 시장을 이야기하면 거의 25억이 넘지 않습니까? 동남아까지 한 30억에 육박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두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여건으로 봐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제2외국어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부터 완벽하게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외국어 실무능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왜 이 문제를 자꾸 국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많은 인력이 제대로 키워지면 이제는 해외에 가서 승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해외취업인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남 목포 출신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재정경제부 차관보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자리가 한 42만 개 증가했다는데 지금 일부 통계나 내용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급증해서 고용시장의 질의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차관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고용의 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하고 사업서비스업에서 한 24만 고용이 창출되었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5만 개가 어디서 창출되었느냐 하면 개인 서비스업하고 음식 숙박업 쪽에서 창출이 되었습니다. 이쪽이 비정규직이 많고 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작년에 서비스산업 쪽이 내수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비록 일자리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수입이 줄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좋은 일자리도 생겨나면서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좋지 않은 일자리도 생겨나고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착종되어서 반반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인데 고용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고를 하실 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7900여 건의 규제 중에서 1000여 건을 금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 이랬는데 1000여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작년 말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를 일일이 등록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0여 건 정도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올해, 특히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

할 대상으로 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1000여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어느 규제를 타깃으로 해서 한다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타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직접 시행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행정부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개월 정도, 시행령 고치고 시행규칙 고치고 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만약에 법개정 사항이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몇 건이고, 또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몇 건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규제를 풀고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구두선으로 그치지 말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만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오늘 보고를 했던데요. 차관께서는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대하다 하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원인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의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이 실제 기업의 수요와 1 대 1 개념으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바로 기업의 수요에 맞게 대학의 입학정원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강

제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또 우리 사회가 학력선호사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구조에서 자녀가 거의 한 명 아니면 둘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 구조조정을 합시다만 얼마만큼 사회 수요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난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대학의 취업현황을……

○**이상열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무리하게 적성을 무시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풍토……

○**이상열 위원** 지금 대학에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대학 취업을 지원한다고 할까 그런 관할하는 이런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부에 취업만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관장은 합시다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는……

○**이상열 위원** 아까 보고를 보니까 대학의 취업 지원실이 평균 4.3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취업교육을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주무부서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중앙부처 조직에서 그런 모든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를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는 대학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서 정도는 신설이 된다거나 있어야 효율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런 업무를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취업을 담당하는 업무는 대학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 수준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취업이 잘 되게 하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이 잘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점에서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이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위원** 안산시 상록구갑 출신 장경수입니다.

대책이 하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짚어볼 것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님, 질의는 안 드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우리 대학은 정원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기관이 된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말로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수년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쪽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했습시다라는 대학의 정원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학습프로그램 같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차장님, 아까 보고하시면서 벤처는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했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그렇습니다.

○**장경수 위원** 아까 박람회도 한다, 융자도 한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예.

○**장경수 위원** 이런 지원 특례가 말로만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것,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하나만 뽑아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벤처가 수출이라든지 매출, 고용창출 등해서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년부터 모태펀드를 통해서 규모를 좀 확대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를 통해서 자금 지원하는 규모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확대를 많이 해 가려고 합니다.

○**장경수 위원**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오셨다가 그냥 가셨지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세제지원이라든가 재정경제부와 협력해서 어떤 특단의 지원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수준이고요, 세제 관련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전체 체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리고 현재 노동계의 춘투에 대한 조짐은 어떻고 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요사이 춘투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산업현장의 분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기업인들은 대체로 올해 노사관계가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부로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초기부터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불법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적법한 파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TF팀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대책을 세운다고 막 설치고 그런데 이 노사문제도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이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여성부차관님 오셨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인턴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방의회 보좌진 제도가 아직 채택되지도 않았고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것도 불확실한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전체 부서의 대책을 보니까 저희가

질의할 것이 대책이라고 해서 표준전과 식으로 다 나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인턴 이런 말까지 다 해 봤는데 이것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입니까? 금년에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금년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 보좌진, 이것은 거기에 표현된 대로 여성단체와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으로서 여성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싶은 여성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보수는 안 나가잖아요?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예, 보수는 나가지 않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에도 보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께만 보내지 않습니까?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옆에서 보좌하도록 자원봉사 성격으로……

○**장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모든 대책을 나열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실천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것, 핵심적인 것을 몇 개 짚어서 진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추진력을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우리가 특위 만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 두 개를 하더라도 정말 실천력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위원장님,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세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7월부터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새로 추가해서 작년 1월, 7월에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장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한 18만 정도의 구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실업자 수는 150만 명에서 300만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실업자 통계는 공식 통계와는 다른 통계입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메워주는 것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2만 2980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43.9%에 이르는 18만 5019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여쭙는데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와서 일자리를 메워주고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문제에 걸려서 또 인권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또 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에 대한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그에 대한 대안은 없었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이 올 8월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규 불법체류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송출될 것이라고 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불법체류 문제의 주무부서는 법무부이고 또 법무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원 다 본국으로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순자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법무부에 해당되는 질의가 아니고 노동부에 해당되는 질의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송출 기간에 되돌아가지 않은 한 6만 명이 국내에 다시 체류할 것으로, 이것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추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약 25만 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

업이 3D 업체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시한이야 법무부에서 하겠지만 노동부는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또 올 8월이 곧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썄, 대안이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서……

○**박순자 위원** 아니, 당장 이 불법체류자들이 노동현장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벌금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가 건강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비자 만료가 끝나서 실제로 돌아가는, 실제 귀환하는 만큼 산업연수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수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수급 계획을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앞은뎡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핵산 아시지요? 이것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가 끝났을 때에는 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이미 본국으로 송출되는 기간도 지났고 산업재해에도 들어 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노동부에서 즉 정부에서 발표된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는 다르다는……

○**박순자 위원** 장관님, 저도 지금 모든 질의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42만 명으로 전달보다도 107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5만 명으로 늘었고 사실상 준실업자로 볼 수 있는 18시간 미만 취업자도 102만 5000명에 달해 지난해 말보다도 무려 18만 5000명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노동부 정책은 결국 단시간 근로자만 확산했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불완전한 취업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준실업률도 정책보조지표로 활용해 정확한 고용현황에 근거하는 고용창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에서도 현재 ILO 기준과 OECD 실업률을 동시에 발표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 취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당 시간대별로 불완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현재 여섯 내지 일곱 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고용이나 취업문제는 사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는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고용정책이고 주된 고용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난해부터 노동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취업자가 실업자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그 정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의 저하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마저도 법정 시행시기에 가서야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44.4%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시 임금을 생산성과 연계하여 조정하거나 인상폭 축소 또는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6.1%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에 대해 74.1%가 법정 시기에 맞춰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총 688억 원을 투입해서 4만 5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총예산의 2.4%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억 원만을 사용하고 1388명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정책 이런 것은 공감이 가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집행실적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인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법정 시간보다 빨리 시행할 적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이 주40시간을 법정 시간보다 일찍 단축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봤는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해서 올해는 이쪽에 대한 것은 대폭 줄이고 교대직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고용촉진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인배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존경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님 그리고 재정부의 박병원 차관보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차관님, 산자부차관님, 여성부차관님, 중소기업청 차장님!

일자리와 관련해 이렇게 각 부처에서 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책을 다 망라해서 작성해 주신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지역에서 한 20장의 이력서를 받아 봤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받아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력서를 여기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님, 차관보님이 해소를 좀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다른 질의는 다 빼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3.5%이고 청년실업이 7.9%인데 정부가 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몇 % 낮추는데 목표가 있으신지, 그 목표가 확실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고서를 보면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연관이 되는 데 일자리 중에는 최소한의 일자리가 있고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든지 나는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 전후의 임금을 받더라도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 면 가겠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100%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이지만 지속 가능하고 발전성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복지 분야, 공공 분야의 상시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고, 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재원을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는 달성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분들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 자신이 실업자라고 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어디 가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체계 주시면 제가 실업자 입장에서 찾아가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재정부에서 말씀하실 거고요.

‘자신이 실업자일 때 필요한 자료’는 사실 현재 인터넷상으로 여러 군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의 워크넷으로 들어오시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메인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다음에 취직을 부탁한 게 20건 정도 있는데 몇 % 정도 해소시켜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취업 부탁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소화를 못 시킨 것이 아니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은 대단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로 대상을 죽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인데요.

인터넷에서 워크넷으로 들어가시면 희망하는 임금 수준별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류된 일자리 분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해서 나누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수백만 건의 일자리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자기들하고 조건이 맞아야 해결이 되겠지만 일단……

○오제세 위원 최대한 조건을 낮추어서 들어갈 테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정보는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업자 3.5%, 청년실업자 7.9%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그 중에 반을 해결해 줄 거냐, 또는 그 사람들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냐, 그 중에 70%가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아까 중기청에서도 보고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눈높이 조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눈높이가 조정된다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위원 마산을 안홍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박사 고학력 실업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석·박사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석·박사 실업률 전체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분야는 취업이 잘 되지만 주로 인문 사회 쪽은 교수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니다.

○**안홍준 위원** 그러면 석사보다는 박사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박사가 한 몇 명 정도 배출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홍준 위원** 대신 담당 국장이나……

외국 박사는 얼마 정도 배출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숫자는 제가……

○**안홍준 위원** 지금 실업률 중에 저학력 실업률, 4년제 대졸이나 전문대졸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학력, 심지어 박사 학위 자격을 가지고도 실업자 신세인 분이 더욱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박사는 한 1만 2000명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미국 박사만 해도 1년에 천사오백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1순위가 대학교수직이고 그다음이 연구소인데 1년에 연구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면 박사학위를 받을수록 학사과정보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석·박사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본인이 자기 전공이 수요가 있는 분야인지 없는 분야인지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는 경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직을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안홍준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분들 중에 석사 정도까지는 일반 학사와 같이 9급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지만 사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9급 시험에 응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자기들에게 맞는, 박사 학

위자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문은 더 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물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 오는 사람까지 규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도 내실이 없습니다.

아마 1년에 국내에서 박사 학위자가 1만 4000여 명이 나온다면 석사하고 합치면 수만여 명이 나올 것인데 그 논문 중에 과연 쓸만한, 우리 산업이나 과학이나 일반 인문 사회 통 털어서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논문이 몇 편이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실업을 면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내지 평가를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해서 종이로만 나오는 박사 석사보다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대학을 과별로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축소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리고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업 활동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 동력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활동 규제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야는 예를 들어 입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기업이 아무래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 이유는 그런 규제도 규제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트 문제지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안홍준 위원** 코스트도 규제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그러니까 코스트 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안홍준 위원**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규

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차장께서는 창업을 위한 규제와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를 분리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됩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제일 많은 게 공장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안홍준 위원 그것은 창업 아납니까? 저는 기업 활동하고 분리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예를 들어 공장 설립하고 운영하고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규제에 들어가지요. 저희가 그런 것도 상당히 대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런 정비를 하려고 하면서 국토 계획법, 환경 관련법, 농지 산지 법 이런 규제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규제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또 하나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가능하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청차장께서 아까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참여정부가 들어선 2년 동안에 규제 완화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물론 아까 재정부의 박 차관보께서 전체적인 규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한 48개를 64개로 확대해서 의제 처리케 한다든지 또는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창업에 필요한 서류가 몇백 가지가 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납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앉아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하룻밤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뭐가 규제의 핵심이고 풀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시위원회까지 두어 가지고 할 만큼 복잡한 사안입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그런데 수시로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홍준 위원 물론 일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업을 하고 있는 분, 창업을 하려는 분 몇 사람 모아서 같이 토론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몇 년 동안 그것을 못 하고 협의회까지 설치해서 발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특히 아까 산자부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할 때의 문제라든지 환경 규제 이런 쪽에 관련되는 투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창업을 하거나 기업 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장 임인배 안 위원님, 지금 두 사람 질의하고 끝나면 추가질의 드릴게요.

○안홍준 위원 끝나고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3D 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피도 문제지만 제가 연초에 제 관할의 자유무역지역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어 봤는데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해도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2, 3개월 안에 대부분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대기업의 3D 업종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바로 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보조하고 후원하는 각 지역에 있는 직업훈련센터 같은 기관에서 그 회사에 맞는 업종과 일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채용된 회사의 일을 하게끔 한다면 적응력도 높이고 이직률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론적으로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은 아주 인력난에 시달리다 인력을 채용했는데 또 장기간 동안 훈련으로 내놓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실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에서는 ‘클린사업’을 통해서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업훈련 관계도 중소기업

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관 위원** 순서를 양보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가 ‘민생 문제에 올인하겠다, 그 중에서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다’ 이렇게 천명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부처의 보고를 들어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국회로서도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특위까지 만들어서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를 불러서 보고받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회의가 듭니다.

재정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고용 창출 촉구를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보고도 받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국회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바람이 있는지, 또 지금 제출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법안과 상관관이 있겠지만 특별히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답이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제 관련 법안들을 여러 가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법들도, 저희들이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는 이런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이 잡혀 있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때도 민생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공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특위 위원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공해 주면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아까 산자부 보고도 있었고 중소기업청 보고도 있었고 다른 부처 다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때문에 일자리는 있는데도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대책에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자리와 관련한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적인 점검, 실제적인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더 비중 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부처 간에는, 중앙부처의 모든 경제 사회 정책이 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인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각종 협의회 또 재정부장관, 사회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문제되는 것이 중앙부처의 입안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선 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의가 되어서 정책이 일관성·통일성 있게 잘 추진되었는지 이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가 되면 일관되게 집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차관보 박병원**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하고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협조사항은 기본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규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경제협의회라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자체는 어차피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즘 최상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것

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듣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취업 현장,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통일성 있게 집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중 있는 관심을 계속 가져 나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 소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경제의 한 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도 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대책 추진이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실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재래시장 소상공인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소상공인은 그 안에서도 계층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체 업체 295만 중에서 230만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각 부처 간에 자료를 통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각각 도매·소매·숙박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인천 서구 강화갑의 김교홍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김대환 장관님을 비롯한 각 부 차관님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대개 보면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직 위주의 불안정한 일

자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차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고서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연계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 1교수 담당제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김교홍 위원** 여기 맞춤형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학협력이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쭙어보는데 1사 1교수제를 하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수평가제에 인센티브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현재로는 특별한.....

○**김교홍 위원** 안 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김교홍 위원**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시간을 내서 한 회사를 담당하는데 교수평가제에 적용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오늘 같이 회의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시스템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평가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한 1사 1교수제라든가 산학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대학에는 평가점수를 좀 높여 주고 평가의 틀도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학이 추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보면 산학협력 속에서 1사 1교수제 또는 각 대학에서 공동 풀제를 운영하면 정말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대학교수님들이 좋은 고급두뇌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제자들인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대학이나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 들은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산학협력을 하는 데 대학 내에서 장애되는 것이 무엇인지 각종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도록……

○김교흥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요즘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판로 문제거든요, 디자인·마케팅 이쪽은 다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고급인력들이 잘 안 옵니다. 그것을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담당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를 지금 해외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무부서가 노동부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특히 주무부서는 노동부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교흥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나가는 젊은 청년들 주로…… 조환익 차관님, 주로 KOTRA 쪽으로 많이 배정되니까? 해외한인무역협회(OKTA)에도 나갑니까?

○산업자원부차관 조환익 그쪽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교흥 위원 재외동포들이 해외한인무역협회하고 KOTRA, KOTRA에는 인턴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외한인무역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670만이라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난번에 예산도 주셔서 운영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어학능력이라든가 문화·습성만 취득하게 하지 말고 해외한인무역협회하고 관계를 하면 장기적인 취업도 가능하다고 보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외국 체험을 해서 그쪽의 전문가를 발굴 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한인무역협회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현지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장기취업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꼭 시스템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를 보면, 이대로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제로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화 작업으로, 각 부처별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움직일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규모 편견주의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 그것은 여러 부처에서 협의해서, 여기 드라마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녹아 들어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여쭙어 보는데 영국의 직업센터라든가 미국의 원스톱시스템센터 이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전문 직업상담원들의 확보, 이것을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IMF 위기가 발생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상담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직업상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부족으로 직업상담이 아닌 다른 고용보험이나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인력 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계획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여기에 중요하게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구조 왜곡을 시정하는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직업상담원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교흥 위원 중요한 것은 인천만 보더라도 실업자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나 임금이나, 규모 편견주의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 이외에도 저는 무엇이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하고 공동으로 조만간 조사 분석을 하고 경영진들도 직접 맨투맨으로 한번 만나

보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산자부나 노동부에 실질적인 DB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문 직업상담원들이 링크시켜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창업 속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연계시켜 주고 전문 상담원이 붙어서 멘투맨으로 상담해 주는 이런 구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점심식사 시간 앞두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렇지만 일자리특위가 워낙 중요한 위원회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핵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부장관님께 마무리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아까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 단지 보조적인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실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올해 이 사업이 또 다시 예산이 이백삼십몇 억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233억입니다.

○**박순자 위원** 233억이나 이렇게 계상되었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라는 것은 보조적 사업으로서 될 것이고 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대제 또한 이 지원금 사업이 보조적 사업으로 올해 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들 모두가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보조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보충설명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효율성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에 이 엄청난 예산을 두느냐? 그 예산을 보다 효율성이 있는 예산으로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든가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재교육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생산성 있는 관리적인 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이미 이 문제는 실패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실 주35시간 근로제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장관이 주장했습니다. 만성적인 실업 해소를 목표로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라는 프랑스가 이미 이것은 단축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은 제공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건비만 올라 가지고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인정했고 영국에서도 이 문제를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부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실패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하고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 사실 작년 7월 1일부터 그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책의 초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정책 자체가 실패다 성공이다 판단하기는 이르고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은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니까 추진을 해 나가고, 다만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의 계획 대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은 대폭 줄이고 대신 지원금 수준은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다시 논쟁이 계속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 때문에 주 40시간 조기 추진을 건언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제 질의의 본질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중점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나……

○**박순자 위원** 예산을 줄였다 할지라도 작년 육백육십 몇억보다는 올해 235억으로 줄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계속 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안으로 생산적인 방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정도의 예산규모로 계획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와 질의를 하면 오늘 이 점심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장관님하고 따로 그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다음은 여성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식사시간이라서 독촉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일자리특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4쪽을 보면 여성 청년층의 경력 개발과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 약 15억을 가지고 1500명의 교육을 실시해서 지방대학 출신들의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지방대학 정의를 원칙을 가지고 내려서 호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충청, 경기 등에 골고루 분포를 하든가, 아니면 인원에 있어서도 그런 분포를 두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1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과연 이것이 맞춤형인지 아닌지 그 취업 결과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고 취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부차관 신현택**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약 50% 이상의 취업률이 있었거든요.

○**박순자 위원** 여기에 46%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부차관 신현택** 50% 가까이 되는데 지방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형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3월에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역문제도 있지만 취업 실적에 보면 거의 여기도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인 취업 해결이

안 될 때는 그야말로 성장과 고용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구색 맞추기 취업, 임시직 취업,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관님, 지금 '여성 청년층'의—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실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부차관 신현택** 그 현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마 자료가 지금 부처마다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여성청년 실업 대책을 여성부가 제대로 수립하려면 정확한 기초적인 취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구축해 주셔서 자료를 제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산업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쪽에서 봐도 여성부가 여성들의 육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중요성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강조를 하면서 시책에 있어서 보면 과연 정말 제대로, 적극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하고 동시에 각 부처가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부가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성청년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중장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중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이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인데 여성부가 이렇게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부 신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참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보니까 0.05%인 4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부가 어떻게 여성청년 실업대책에 앞장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부차관 신현택**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시범 내지는 선도사업들입니다. 노동부라든지 각 경제부처가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이라든지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대책’, 또 최근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인적자원회의’ 등에서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 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여성부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그 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 고용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은 여성부가 돌격적이지 못하고 적극성이 없다는 것으로…… 타 부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여성부가 여성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챙기려면 타 부서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컨대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대해서 우리 여성인력이 여기에 얼마나 동참을 했습니까? 차관님,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여성부차관 신현택 예.

○박순자 위원 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우리가 몇 %나 참여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로 ‘해외 IT 교육기관 파견 연수사업’ 역시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저조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아마 통계도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성부가 어떻게 여성청년 실업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여성부차관 신현택 그래서 ‘국가 주요의제 성별 영향평가’를 올해 하나까요, 각 분야별로 비율들이 아마 올해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 취업 중에서 그야말로 능력 있는 인력을 지금 임시직, 단기직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정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에 그 비율을 높이도록 여성부가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부차관 신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박순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여성이 국가 인력

의 반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시간 중에 시간 관계상 홍미영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3월 12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특위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出席委員(12人)

김 교 홍	김 영 덕	박 상 돈	박 순 자
서 재 관	안 흥 준	오 제 세	이 상 열
임 인 배	장 경 수	정 종 복	홍 미 영

○出張委員(1人)

정 덕 구

○出席專門委員

수 석 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이	동	근

○政府側參席者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고 용 정 책 실 장	노	민	기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차 관	김	영	식
인적자원총괄국장	김	광	조
산 업 자 원 부			
차 관	조	환	익
산 업 정 책 국 장	이	동	근
여 성 부			
차 관	신	현	택

기 획 관 리 실 장	김	애	량
재 정 경 제 부 차 관 보	박	병	원
중 소 기 업 청 차 장	정	준	석